

“공고엔 주5일, 계약하니 주6일”... 부당 채용 281건 적발

고용부,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발표
워크넷서 부당광고 예방체계 가동
민간 채용포털 연 2회 집중 모니터링

A 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는 월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면접이나 채용 시엔 월300만원·주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B 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서 지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혼인유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구인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법위반 채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광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늘었다.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석 달 만이다. 아울러 지난달(28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뉴시스

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 전가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공고를 등록할 때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구인신청 시 부당한 채용공고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 필터링한다.

아울러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람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라면 공장 증설 현장서 ‘수출증대’ 논의

케이-푸드 플러스 확대 협업 강화

정부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등 식품분야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생산공장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밀양시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은 6일 삼양식품 ‘밀양2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국내 농식품분야 수출 1위 기업으로, 주력상품인 라면을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공장이 완공(내년 상반기 예정)되면 연간 5억6000만 봉지 분량의 라면이 추가로 생산되며, 연간 최대 생산량은 현재 18억 개에서 23억6000만 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기존 1공장을 통해 중국시장 기반 수출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2공장은 미주시장을 겨냥한 전초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밀양2공장 설립과 수출 전용 소스라인 증설 등으로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삼양식품과 같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2024년도 K-Food+ 수출 목표 135억 달러(농식품 100억 달러, 전후방산업 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20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략 발표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K-Food+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 수출·투자를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은 1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라면(35.2%)과 음료(27.9%), 쌀가공식품(31.7%), 인삼(30.7%), 김치(13.2%) 등에서 크게 늘어났다. 수출대상국별로는 유럽연합 24.2%, 미국 15.9%, 아세안 7.9%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대출지원 개시

산업부, 친환경차 보급 이차보전사업 연구개발 등 업체당 자금 100억 한도

정부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포인트를 최대 8년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 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해 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작년까지 84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시설자금 분야 57곳, 연구개발자금지원 26곳, 인수합병 자금지원 1곳 순이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은 3월 7일~27일까지로,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첫 전수조사 실시

권익위, 전국 광역지단체·교육청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별도 분석한다.

권익위는 4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도 △정직도 △부패사태 평가(감점) 3개 영역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

점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영역인 ‘부패사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 올해 12월 경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뉴시스

IoT 기반 농기계 사고 예방 기술 상용화

농진청, 전국 14개 지역 단말기 설치

농촌진흥청이 6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난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IoT를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2023년 3년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LED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

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했다”며 “그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으며 60km/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세종=김연세 기자